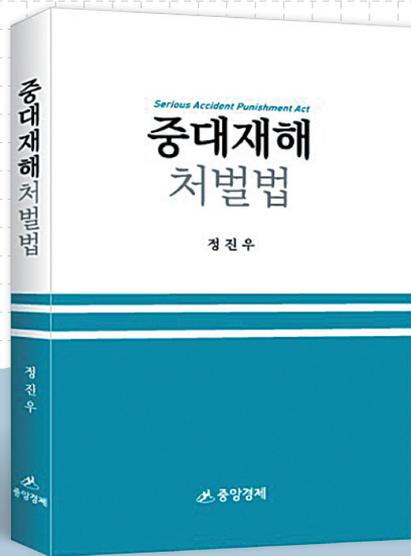


종합적이고 구체적인 해설서

중대재해처벌법(개정판)



저자 정진우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교수)

출판사 중앙경제

발간일 2022년 11월 2일

필자는 연구자 중에서 국내에서 유일하게 산업안전보건법으로 박사학위를 받았다. 그래서인지 산업안전보건법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이해가 누구보다도 깊다. 개정판으로 출간된 「중대재해처벌법」은 시중에 나와 있는 다른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서적과는 달리 중대재해처벌법을 법적으로만 접근하지 않고 안전원리와 접목해 설명하고 있는 점이 특징이다. 이 책은 중대재해처벌법을 정부 해설서에 의존하여 설명하는 데 그치지 않고 조문별 구체적 설명과 함께 비판적 관점에서 조망하고 있다. 또한 중대재해처벌법이 비교법적 관점에서 어떤 위상을 갖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자세히 설명하고 있다.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해 자의적 해설에 제동을 걸고,
법치주의 관점에서 심도 있는 분석,
문제점 지적과 더불어 대응방안,
해결책 제시가 절실한 상황이라고 할 수 있다.



개정판 머리말 요약

초판이 발간된 지 불과 6개월밖에 지나지 않았지만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관심이 높아서인지 초판이 짧은 기간에 소진되었다. 2쇄를 내야 할지 개정판을 내야 할지 고민했지만, 초판을 급하게 발간하느라 초판에서 미처 담지 못했거나 설명이 충분하지 못한 부분이 적지 않아 개정판을 통해 보완해야겠다는 생각에 개정판을 내기로 했다.

행정부처와 검찰에서 중대재해처벌법 해설서가 나와 있기는 하지만, 이 법에 대한 궁금증을 풀기엔 턱없이 부족하고, 심지어는 상당 부분이 법적 근거 없는 자의적이고 무책임한 해석으로 채워져 있다. 특히 고용노동부의 해설서는 법리적인 면, 안전원리 면에서 이치에 맞지 않는 설명이 차고 넘친다. 대검찰청 해설서는 대검찰청의 공식 입장은 아니라고 밝히고는 있지만, 주로 고용노동부의 설명과 안전관계법 전문가라고 결코 말할 수 없는 자들의 단편적인 견해를 짜깁기해 놓은 수준에 불과하다.

정권 교체 이전에 발간된 것이긴 하지만, 정부부처의 이러한 무작스러운 해설에 누군가는 학문적으로 문제 제기를 하는 한편, 법리적이고 안전원리에 부합한 해설을 제시해야 할 필요성이 매우 큰 상황이다. 즉,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해 자의적 해설에 제동을 걸고, 법치주의

관점에서 심도 있는 분석, 문제점 지적과 더불어 대응방안, 해결책 제시가 절실한 상황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현실은 안전원리나 작업현장에 대해 문외한인 데도 안전보건 전문가 행세를 하면서 처벌이 엄벌이 곧 정의라는 도그마에 빠진 듯한 발언을 하는 사이버 학자가 의외로 많다는 점이다. 일부 대형로펌도 꿀볼 견인 것은 마찬가지이다. 재해예방의 실효성은 따져보지도 않고 돈벌이를 위해 중대재해처벌법의 홍보대사가 된 듯한 곳도 적지 않게 있는 것 같다. 산업안전보건에 대한 철학과 전문성도 없으면서 운 좋게 개방적으로 고용노동부 산재예방정책국에서 잠시 일한 자를 장삿속을 채우는 수단으로 활용하는 데 혈안인 로펌도 발견된다. 직업윤리는 온데간데 없는 것 같다. 적지 않은 안전보건 컨설팅기관도 중대재해처벌법을 돈벌이 수단으로 활용하는 데 앞장서기는 오십보백보이다.

이 가운데서도 객관적이고 비판적이어야 할 학계의 아마추어적이고 무비판적인 입장이 필자로 하여금 중대재해처벌법 해설서를 발간해야 한다는 사명감을 심어 주었다. 누군가는 중대재해처벌법의 민낯을 구체적으로 해부하여 분석할 필요가 있다는 주위의 권고도 이 책을 발간하게 된 동기의 하나이다. 이 책이 중대재해처벌법의 위상, 다른 법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위험 소지, 비실효성의 문제, 해결방안 등에 대해서도 심도 있게 다루게 된 이유이다. 📖